



전국 무량판 불법공사, 인천시, '민간·공공 감독기구' 강화해야

정부는 건설현장 감독기구로 '지역건축 안전센터' 활용 필요성 제기 대통령 지시로 국토부, 17개 광역시·도와 '무량판 협의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 지역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파문이 확산된 가운데 인천도시공사 또한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조사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을 지목해 전수 조사와 안전보강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17개 광역시·도와 '무량판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안전점검' 지침이 확정되면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협회 등 3개 기관과 매주 '진행 상황 점검' 회의를 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 중에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95곳), 서울(54곳), 부산(48곳), 인천(34곳), 대구(14곳), 경남(13곳), 울산(10곳) 등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는 LH의 총체적 부패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중앙·지방 안전점검 협력'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유정복 호의 기조로 알려졌다.

그리고 정부는 '민간 건설현장의 감리를 감리하는' 지방정부 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정부는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 소속의 '감리 감독기구' 신설을 고려하는 듯하다.

이 같은 사고인지 정부는 '광주광역시 화정 아아파크 붕괴사고' 등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지난해 1월, 시·도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의무화했다.

안전센터가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인허가 시 설계도서 검토, 공사감리 관리·감독,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정부가 민간 건설현장과 LH 등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모두 포함하는 '감리 감독기구' 신설을 고려한다면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활용할만하다는 것이 여론이다.

다만 안전센터의 의무 도입 시기가 짧아서 필수인력인 구조기술사

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자의 낮은 연봉 및 처우 체계와 안전센터 정착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의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력하다.

이에 "정부는 옥상옥의 중복적인 별도 기구를 구성하기보다는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정상화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간 '건축물 안전에 대한 협업' 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이 크다"라는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LH에 대한 순살 아파트 파문, 설계·시공·감리 총체적 부실, 전관 특혜 등의 책임을 물어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LH는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설립 목적처럼 공익성과 공공성을 위한 택지 및 주택건설 사업에 매진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LH는 무량판 부실시공에다 은폐 의혹, 이권 카르텔까지 불거지면서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이에 정부가 국민이 외면할 만큼

지자체 별 무량판 구조 건축물 전수조사 진행 상황

지역	진행여부	비고
서울	54곳 0 (7월 10일~)	SH 준공 8곳 포함
부산	48곳 0 (8월 7일~)	일반건축물 포함
대구	14곳 0 (8월 3일~17일)	
인천	34곳 X	점검 검토 중
광주	2곳 0 (2013년 이후 준공으로 확대)	화정아아파크, 선문지구 제외
대전	9곳 X	점검 예정
울산	10곳 X	도면 점검 중
세종	1곳 0 (2013년 이후 준공으로 확대)	철근 누락 없음
경기	95곳 △ (GH 7곳 점검 중)	8월 중순 점검 예정
강원	7곳 X	8월 중으로 국토부와 합동 점검 예정
충북	9곳 X	국토부 전수조사 예정
충남	3곳 X	점검 예정
전북	9곳 X	검토 중
전남	9곳 0 (8월 3일~11일)	
경북	4곳 0 (8월 2일~)	
경남	13곳 0 (8월 3일~)	7개소 안전점검 중, 6개소 정밀안전진단 예정
제주	1곳 X	주상복합아파트

자료=각 지자체

부패한 LH를 강도 높게 개혁해야 한다.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혐의로 논의됐다가 흐지부지된 혁신 방안을 소환하는 등 애초 설립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 당시 정부가 제안한 혁신안은 토지와 주택부문을 쪼개고,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LH로의 과도한 역할 집중'이 부패를 양산시킨 만큼 '택촉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방공사(지자체 산하 도시공사)에게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때라고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안전과 주거안정, 재산권 보호를 위해 LH 개혁방안을 비롯한 건설안전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국민 여론은 이번 무량판 부실공사로 논란을 불러온 LH 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어 분발이 촉구되고 있다. 또 이참에 윤 정부도 건설 카르텔을 뿌리를 뽑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 주길 기대하고 있다.

데스크칼럼



김양훈
논설위원

대한민국 양극화 현상, '사상보다 진영논리'

대한민국 갈등의 문제는 사상적 문제보다도 진영논리가 국민을 홀리며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정치권 위정자들의 갈라치기가 양극화 현상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 기득권도 줄을 잘 타면 짜인 틀 안에서 내 편의 자리가 배분되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들은 인사권자 눈치를 보며 근평 등 승진의 기회를 얻어 공조직에서 승승장구한다.

인사권자가 원하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혈세·행정 집행을 일삼는 부패 카르텔이 오늘날 자치행정 민낯이다. 정치 공무원들의 후진적 행동이 국민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공조직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은 유실됐다. 인사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부' 공무원들은 '정' 단체장의 중을 파악하고 입맛에 맞추는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인사위원회 무늬는 그럴듯한데 실제 인사 권한은 위원회에 있기보다 근평·배수 선택은 단체장의 중이고 좋은 자리로 보내서 키우면 끝이다. 현행법을 이용한 근평 조작의 시발점이 됐다.

공무원들은 선출직 정치인들의 머슴에 불과하다고 국민 일침은 결과물로 보인다고 한다. 이는 부패 카르텔을 만들어내는 동기로

정치권 등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정치인들 명분은 국민 앞에서 '머슴·섬기겠습니다' 미사여구를 늘어놓는다. 실제 속성은 출세 목적이란 사실을 국민은 알고 있다. 오늘 정치가 참담한 이유라고 보면 되겠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기득권층 진영에 들어가지 못하면 중앙정치 참여 등 출세란 없다. 정당정치 국회의원 서열 눈치는 상·하향식 군대의 계급과 다르지 않다는 것.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자칭 머슴들은 자치위원들의 자화상이다. 다음 선거 때 공천을 받기 위해서 당협위원장 뒤처리를 하지 않으면 보장이란 없다. 줄서기 정당 조직의 폐단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불과한 내부를 들여다보면 권력의 맛에 취

한 정치인들이 정권에 따라 공조직을 장악한다. 공무원들은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슴에 삶을 살고 있다.

공무원들은 선출직들이 시키는 일에 충성하거나 하지 않으면 명운이 갈리기 때문이다. 승진이란 기회는 현실적 문제로서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겠는가, 민주주의란 이런 나라가 아니다.

최근에도 선출직을 대항하다가 좌천이 되는 등 나라의 정의는 힘의 논리가 됐다. 기업도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정치자금 등 온갖 방법으로 접근해야만 대기업을 키울 수 있는 구조다.

정치가 카르텔의 원조로 윤석열 정권이 "불법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라고 한다.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척결이 될까? 병폐는 정치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사회구조

가 바뀔 수 없다.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부패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공조직 시스템을 정밀하게 손질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공조직 제도개선의 자구적인 노력이 없이는 개혁이란 없고 폭포수에 걸지만 손상된다. 이런 폐단을 알면서도 진영의 논리 때문에 정치 후퇴와 국민이 불행하다.

윤 대통령 의지가 아무리 확고해도 근본적인 암 치료를 하지 않고는 수술 자국만 남기는 꼴이 될 것이다. 시스템 개선이 없이는 '용두사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정부는 1회성 부패 카르텔 척결이라면 시작도 말라, 자칫 정치보복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훗날 평가를 받으려면 시스템 개선의 정치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대안이 제시될길 바란다.